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13일의 금요일' 저녁 8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 귀신이 나타났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통제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달빛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벌인 것.

'여성에게 밤길을 되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성폭력상담소, 언니네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일상이 성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통제되어 왔는지 알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밤에 배고파도 무서워서 못나간다', '우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고 싶지 않다'는 등의 피켓으로 여성들이 밤길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표현했다.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박정애 씨도 "밤길을 혼자 갈 때 항상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느낀다"며 "일상이 공포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왜 밤늦게 다녀", "여자 옷차림이..." 등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폄화로 돌리는 말들은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강경화 활동가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양산해 왔다"고 꼬집었다.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거리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과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나눠주며 '밤길'을 확보했다. 이들은 다시 국세청 앞에 모여 귀신 복장을 위해 걸치고 있던 하얀 옷을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억압과 통제의 의미로 해석, 이를 벗어 던지며 자유롭고 안전한 밤길을 꿈꾸기도 했다. 이어 '밤길'과 '성폭력'의 위협을 연결시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통제하는 사슬을 흰 천으로 표현해 끊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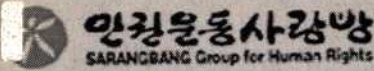
행사에 참가한 신영수 씨는 "말을 키우는 엄마로써 '조심해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들 스스로도 공포에 갇혀 있지 말고 빼앗긴 밤길을 되찾자"고 말했다.

'밤길 되찾기'는 1973년 독일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반여성폭력 이슈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7일 (화)

제 26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2. "전국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세요"
3.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박천웅과 지을
4.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의 중요한 취지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정부가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하여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차에 태운 후 등록된 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확인된 경우는 강제로 연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등을 이른 새벽이나 한밤에 급습하거나, 일요일 종교집회에 오는 이주노동자들까지 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과 관련 없이 우선 수갑을 채우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후 보내주는 일도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이주노동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일단 잡아들이고 난 후, 선별해서 풀어주거나 강제출국, 보호소 수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 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천웅 목사는 "불법체류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배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는 위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처요령으로는 △목비권 행사 △긴급보호명령서 제시 요구 △영장 혹은 긴급보호명령서 없이 공장, 주거 침입 시 건조물 침입행위임을 알려 항의하기 등이 실려있다.

☎ 문의전화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031)492-8785

<기사 처음으로>

"전국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세요"

장애인교육권연대, 8개 도시 교육청 돌며 합의 이행 촉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각 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6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동안 대전, 대구, 제주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알려내고 각 지방 교육청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설치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 설치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7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합의를 얻어냈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전국순회투쟁'은 이러한 교육부와의 합의를 현실에 옮기기 위한 직접적인 발걸음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형수 사무국장은 "교육부와 합의는 했지만 담당 지방 교육청이 예산결정권,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항들을 강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도 교육부가 장애인 교육에 대해 지침을 내려도 지방 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의 담당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알려내고 행정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 말했다. 또 "이번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부모·당사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순회투쟁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을 출발하여 인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국순회투쟁을 마치고 난 다음날인 26일에는 오후 6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보고문화제에 결합한다.

<기사 처음으로>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박정희와 지울

지금 박정희는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려 하고, 지울은 천성산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해 40여 일이 넘는 목숨 건 밥 굶기로 죽을지도 모른다.

한반도 남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졌던 경제발전을 좋아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질까.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할까. 오래 전부터 미국의 밤거리는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예비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패권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다.

박정희 기념관을 지으려고 언덕 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돈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경제개발을 위해서라면 사람과 뭇생명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룬 경제발전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결국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평화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끝없는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삼라만상을 다 죽이지 마라. 나라의 살림을 살찌운다는 이름으로 이라크의 착한 인민들을 죽이려 남녘의 군대를 보내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세상을 다 죽이는 사회가 아니다. 허울뿐인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원한다.

지울, 가너린 스님 한 사람의 맑고 밝은 목소리가 세상을 살리고 있다. 그는 왜 목숨 걸고 밥을 굶으며 싸우는 것일까. 단지 천성산의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일까.

"지금 저는 청와대 앞 노숙장소를 잠시 벗어나 청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가난한 잠자리마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번 주 안에 저를 처리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전에 비켜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멀리 보내고 싶어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내려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 당신이 재게서 빼앗을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을까요...."

이 글은 얼마 전 지울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 편지 중 일부다. 모든 것이 경제논리에 빠져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버려 뭇생명을 살리려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한없이 낮춘다. 자기 속에 있는 가난한 욕망조차 버리려 한다.

이제 제발 살아있는 것을 마구 죽이는 개발독재자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우리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룬다는 사탕발림으로 이라크 아이들을 죽이려 가는 파병을 막아야 한다. 사람이 몇 십분 빨리 가기 위해 천성산의 수천 수만의 생명을 죽이는 고속철도는 필요 없다.

아! 지울 스님 제발 죽지 마세요.
좋은 세상을 때까지 살아남아 싸워야 해요.

◎은종복 님은 '풀무질' 서점 일꾼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충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8.12)

2. '파업 후 노동자 길들이기' 예고된 수순?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강요하며 출근 저지, 일부 노조원들 대상으로 중징계·고소·고발 진행 및 손해가압류 신청(8.9)/ 서울지하철·도시철도노조, 파업 후 사측의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강력히 반발, 본사 앞에서 농성 진행(8.12)

3. 세계는 지금

미군, 나자프·카시디아 지역 다국적군으로부터 통제권 넘겨받은 후 나자프 총공세 돌입 ... 수십 명의 이라크인 부상 및 사망/ 휴먼라이츠워치, "이스라엘 정부 예산안에서 팔레스타인 아랍계 학교에 대한 만성적 차별 현저하다"고 보고(8.12)/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에서 소환 찬성 42%, 반대 58%로 소환 부결(8.16)

4. 기타

"도둑 찾겠다"며 학원생들에게 지문 찍게 한 혐의로 학원장 300만원에 약식기소/ 국가인권위, 현행 전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 질문 "평등권 침해"로 결정/ 검찰, 삼성에 스티아이 직원 위치추적 수사 나서(8.10)/ 서울지방노동청, 롯데리아, 케이에프시 등 패스트푸드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고용실태 조사 발표 ...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 노동 행위 드러나 (8.11)/ 한·일 평화운동가들, "이라크 철군" 한 목소리로 평화순례/ 국가인권위, 원폭 피해자 2세의 현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조사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 무더기 해고 철회 및 용역장폐의 폭력을 막안한 경찰관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팎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8일 (수)
제 26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불법딱지 때도 인권침해 여전
2.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3. '경찰 공안부 폐지해야'

불법딱지 때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늘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업주들이 이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각종 협박을 한다"며 "추가 수당 없이 연장 근무와 휴일 특근 등을 시키며 임금 체불을 하고, 재계약 시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는 등 계약조건을 나쁘게 하지만 사업주가 계약권을 쥐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거나 미등록상태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용조건에 있어서 불안정성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자히드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제도도 몇 가지 조항만 바뀐 채 그대로 실시된다. 서 씨는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병행적으로 실시되므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가하는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히드 씨 역시 "이번에 산업연수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것과 똑같다. 여전히 현대판 노예 제도다"며 "본래 4시간 교육을 받고 4시간 노동을 하는 연수생의 제도는 간데 없고 하루에 12, 13시간 중노동을 하며 최저임금 50만원을 받는다"고 산업연수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사업주가 노동자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50만원 중에서 반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13시간씩 일하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30만원 뿐"이라며 "그 돈으로 먹고살고 본국에 돈을 보내 가족을 부양하고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빚진 1,500만원을 갚으려 하니 10년 일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당장 돌아가라고 하니 수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민주노동당 등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1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비판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2가 붙고,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가 매겨진다.

출생과 동시에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이 변경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트랜스 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된 성이 본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인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려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숫자 부여 방식이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배정함으로써 항상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적이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여받는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지 않는다면 위의 문제의 해결도 용이하다"며, "성, 나이, 생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광범위한 개인식별자로 쓰이는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보인권모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0000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인'을 모집합니다.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031-213-2105)

<기사 처음으로>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확대해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개편했다. 1998년에는 다시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측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을 근거로 억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념이 퇴색하면서 '공안'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해 온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핑계로 존재 정당화

검찰이 공안 사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증거주의를 지키지 않고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를 남발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 송호창 변호사

는 "항소심 법원이 송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서울지검 차장검사가 '김정일을 불러오란 말이나, 그렇게 엄격하게 증거판단을 하면 공안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이는 검찰 공안부의 수사관행이 엄격한 증거주의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원칙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교수 사건은 공안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강행이 낳은 결과이다. 공안 검찰은 더 이상 국가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박성희 간사도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검찰 공안부가 다양한 논의와 토론,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들을 '공안'의 이름으로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제한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제기편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극단적인 냉전논리를 강요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온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증진 위해 공안부 폐지 당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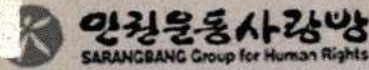
검찰 내부에서도 노무현 정권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법무부는 공안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17개 공안과 가운데 16개를 폐지해 감축되는 인력을 대부분 다른 부서로 흡수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희 변호사는 "시행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공안부의 존재가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형사부나 '범죄'를 중심으로 한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질서에서의 공공의 안전이란 주민투표, 국민소환, 정당제도, 대의제도, 언론과 출판 등을 통한 절차적 합의과정을 통해 획득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거 '공안'의 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공안 검찰이 과연 '인권증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19일 (목)

제 26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2.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3. [알림] 2004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연중포럼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환영하면서도 진상규명이 실질화 되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과거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던 국가기구들의 자기반성과 함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대통령이 과거청산 의지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기구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 자료를 제시하거나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혹사건을 처리하였던 권력기관은 사건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로 과거 비민주적 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인혁당, KAL기 폭파, 군 녹화사업, 유서대필,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한 1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국민위원회는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 제안은) 국가적 중대사안인 역사의 진실규명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작으며 또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이라는 원칙 하에 기구의 권한과 방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문사가족대책위와 군가협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는 "국방부는 의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훈 중위, 허원근 사건처럼 국방부 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진상을 낱알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진실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사건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군경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도 "조직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국가기관이 제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상 국방부 차원의 제조사는 아무리 반복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과거청산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청산이 이번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과 미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거청산의 시작은 국가권력에 의해 일어났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길거리를 거닐다 경품을 준다는 응모에 응할 때, 수표를 사용할 때, 비디오나 책을 대여할 때,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치를 때 등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수한 요구에 맞닥뜨려야 할 때마다 내밀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1962년 제정 이래로 웅당 자연스러운 듯 일상 곳곳에 침투해 온 주민등록법은 감시와 통제의 주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등록제도=인권침해제도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의 취지는 희석화된 지 오래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현 주민등록법이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악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주민등록법 제3조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주민'등록법임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등록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윤 활동가는 주장했다.

과도한 주민정보를 모으는 것도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이다. 주민등록법 상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할 개인정보의 항목은 10여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서식의 양식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100여 가지 항목을 초월한다고 윤 활동가는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수집된 정보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윤 활동가는 "수집정보는 주민등록법 상의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른 조례에 바탕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 활동가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동의 없이 열람을 금지하거나 열람의 근거 없이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동의 철회, 삭제, 반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시 본인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 주민행정업무의 책임자인 행정자치부에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윤 활동가는 강제적으로 민감한 신체 정보를 채취하는 지문날인제도와 만 17세가 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폐기, 새로운 일련번호로 대체 가능

진보네트워킹센터 이은우 운영위원도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개인정보를 담지 하지 않은 새로운 일련번호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주민등록번호 납용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우 운영위원은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바꾸자는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개인의 필요는 외면한 채 집단적 감시 체계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모색한 자리였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2004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연 총포럼

4회 반(反)차별 포럼 - 노동과 차별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반차별 포럼에서는 인간생존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성적 차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고 대안적인 노동권개념을 상상해본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동권 개념이 노동과정에서 여성이 느끼는 경험을 인식하고 반영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해, 성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노동권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확장시켜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해본다.

○ 1부 <모듬 토론>

○ 2부 <발표와 토론>

* 발표 1 :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해결방안과 쟁점

(정지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팀)

* 발표 2 : 성적 차이와 노동권의 재구성

(조주은, 여성학 강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때: 8월 19일(목요일) 오후 5시 30분

▷ 곳: 노동사목회관 (6호선 보문역 7번출구, 02-924-6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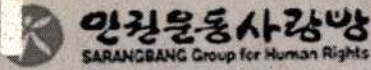
▷ 참가비: 3천원

▷ 참가문의: 타리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02-441-2392)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20일 (금)

제 26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3.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4. <알림>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원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주 골자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설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고, 현역병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은 인권·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군대의 첨단화·정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일반 병역과 비교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나 국방력 약화의 문제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는 "대부분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복무기간은 병역 기간과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나, "당초 36개월이었던 대체복무기간을 실시 3년 후에 24개월로 단축시킨 대만의 경우처럼, 입법 후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복지부 등에 심사기관을 두는 다른 나라의 예처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의 위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도 대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금 병역거부로 인해 형이 집행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람들, 미결 상태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제임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지요원만이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자격을 확대하여 건설, 환경 등 다양한 일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 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글쓴이: 나스 마사모토/그린이: 니시무라 시게오/펴낸곳: 사계절/69쪽/2004년 4월

해방 59돌을 맞아 끝나지 않은 식민지의 고통을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올해는 주요 방송사들이 원폭피해자 2세대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내 최초로 원폭2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이 조금씩 암흑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핵무기의 참혹성을 알기 쉽게 풀어낸 우리 책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일본에서 나온 이 그림책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의 희생물이 된 역사적 배경과 마침내 '운명의 그 날'이 찾아온 이후의 참혹했던 상황들을 세밀한 그림과 담담한 필체로 잘 그려낸 교양서이다. 원폭이 투하된 직후 사람들을 집어삼켰던 밝은 섬광, 거센 폭풍이 잦아든 직후의 암흑과 끝이어서 치솟은 불길,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 등이 사실적으로 재현돼 전쟁과 핵무기의 참혹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림을 그린 니시무라 시게오가 한 해 동안 히로시마에서 살면서 생존자들을 만나 그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 공을 드린 덕분일 것이다. 또한 히로시마도 독자들을 안내하는 어린 영혼 타로는 군복과 다름없는 교복을 입고 있어 당시 전쟁의 광기가 어린이들의 삶까지 지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책 곳곳에 원자폭탄이 제조되기까지의 과정과 핵무기의 과학 원리, 방사능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 핵실험과 핵발전소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히바쿠샤'(피폭자), 핵무기 막기 위한 유엔의 활동과 평화운동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실어 고학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읽어봐도 좋을 책으로 만든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피폭자 가운데 조선인 2만명도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 조선인들이 왜 그곳에 직·간접적으로 끌려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인색하다. 원폭의 재앙은 일본인들만의 것으로 전유되어 있는 셈이다. 그 날의 기억마저도 식민화된 현실은 과거청산의 과제와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사 처음으로>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4대 보험도 없습니다. 빨간 날 맘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하루에 두 명씩 동료들이 죽어나갑니다. 임금체불은 아예 일상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삶이다. 하지만 하루 밥이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해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건 마가진 몸뿐이란단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일손을 놓았다.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그 주인공. 이들은 7월 12일부터 옛세동안의 파업에 이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60일이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요"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준호 씨는 15년이 넘게 건설 일을 해왔다. 지난 6월에는 일을 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 신청도 마음놓고 할 수 없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한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며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산재 처리를 받은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공상 처리를 하도록 노동자들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꼬박 11시간을 일하고도 잔업수당은 받지 못한다. 일을 하는 노동자는 총 350명인데 샤워꼭지는 10개밖에 없어서 땀범벅에 면직을 뒤집어써도 제대로 씻지 못할 뿐더러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도 없어 길가에서 갈아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동조건 개선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불법과 비리의 주범 다단계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조 동백지구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이승우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주고 있다"며 "(원청에서) 원가의 70%정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이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다보니 결국 노동자들은 최초인건비의 40%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공사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을 해야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집행위원장은 주장했다.

더욱이 일을 하다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해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이 집행위원장은 "팀장(일명 오야지)도 노동자인데 하청에서 또다시 팀장과 도급계약을 맺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자가 다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비용이 나오거나 4주 이하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팀장이 책임지도록 하거나 안전장비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산재를 은폐하고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하청업체들이 중간에서 착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이 집행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싸움이 이겨야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요일 유급휴무제나 4대 보험 보장, 노조활동 보장 및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을 없앨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운동 준비 간담회

일시 : 2004년 8월 25일 늦은 6시
 장소 : 민주노총 3층 1,2회의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21일 (토)

제 26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2.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3.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4.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5.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6.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목소리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작전'을 펴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들을 전국을 샅샅이 뒤져 추방시키겠다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해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친구의 결혼식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까지 연행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추방시켜 왔다. 치료 중인 환자와 임금 채불 등으로 진정 중인 이주노동자도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공장, 주택, 길거리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까지 가리지 않고 쳐들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다가 이 잡듯이 찾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력한 합동단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야만적인' 단속 이후에 일일 평균 자진출국자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며 신이 났다. 그러나 수갑과 끈봉 그리고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되는 단속과정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와 폭력 그 자체일 뿐이다. 결국 강제추방의 두려움에 떨다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단속이 무서워 집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어두운 밤 한 칸에 의지해 마음을 풀이며 살아가고 있다. 잡혀서 본국으로 추방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정부가 강제추방을 통해 얻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평등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 기숙사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잡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장소를 대라"며 하복부를 발로 차고 각목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검에 질린 A씨가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면서 "당신들 누구냐"며 항의했는데도 이들은 "우리는 경찰이야. 너희들 비자가 있어도 우리가 다 추방

할 수 있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이들 중 일부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단속반원들은 공장 안을 살살이 뒤졌다.

마침 공장에 들어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박 아무개 씨가 "누구 허락을 받고 공장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비자가 있는 합법체류자인데 왜 그러냐"며 제지했으나 단속반원들은 조서를 꾸미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타고 온 봉고차 안에 가두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뺨을 때리며 "친구 중에 불법체류자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A씨는 새벽 1시경이 되어서야 풀려났고 한국인 동료들에 의해 광탄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날 제보를 받고 A씨를 면담한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연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된 단속반원들이 이제는 불법 주거침입까지 불사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당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파주시 광탄면으로 단속활동을 나간 적은 있다"면서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구타한 사실은 없고 수갑 사용 여부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방의 안전과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공장주의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 공장에 들어간 것은 형법 상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수갑까지 채운 것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독립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과거사 대응에 맞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은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과거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미봉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통합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서는 안되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국장은 "그 동안 과거사 사안들의 해결에 각각 편차가 있었고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었다"며 "각각의 사건을 진상규명이라는 큰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해 민간영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 관련단체와 시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힘을 신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불처벌과 투쟁 및 올바른 과거청산의 원칙을 계속 확실히 나가는 일은 과거의 인권침해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불들고 있다는 점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 지점이다. 1997년 루이 주아네 씨가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불처벌과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및증진원칙(E/CN.4/Sub.2/1997/20)』에는 불처벌과 과거청산의 기준으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춰, 끊임없이 과거청산의 과제를 보여주는 일은 물타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을 향해 '인권적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작업장 곳곳이 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에 급급한 지체 장애 여성의 속도를 고려해 보았을까.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은갖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작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받는 가사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을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은 19일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일상을 지배하는 여/남, 비장애/장애, 동성애/이성애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노동시장에 그대로 투영되어 사회적으로 현존하는 차별을 강화한다. 자본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좀더 차별에 익숙한 이들을 찾아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나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한 발씩 멀어지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직 시 40만원에 불과한 임금지급 등에서 도드라지듯이 모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강조되지만, 임금을 환산하는 가치의 기준은 고학력·사무직·남성 노동자들의 경험을 앞세워 정해진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가사 노동이 현저히 저평가 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활동가는 "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노동과 보살핌의 노동을 비롯,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학을 가르치는 조주은 씨 역시 "가사 노동이 가족에의 실현이라는 허울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며 "여성들의 노동권과 가족노동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간병인, 간호사, 텔레 마케터 등 가사 노동과 유사한 성격의 직종에 종사한다. 그런데 여성들이 감정과 보살핌을 수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을 감싸고 있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정당화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권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모성본능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여성들에게는 희생과 부드러움을 앞세운 모성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여겨져,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이 수반된 가사 노동이 여성의 역할인 양 치부된다는 것이다. 조 씨는 "육아의 사회화를 통하여 보살핌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가족 내에서 가사 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1순위로 오래 여성 노동자들이 꼽히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이란 말속에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이 녹아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사 처음으로>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1일로 지을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단식이 53일째를 맞고 있다. 5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벌써 같은 사안으로 3번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지을 스님에게 천성산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옆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을 스님은 단지 천성산 지킴이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인해 파괴되기 직전의 천성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름다운 천성산에 고속철도로 인해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 그 터널로 인해 단축되는 시간이 불과 22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꼬리치레 도롱뇽을 비롯하여 각종 희귀생물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롱뇽 소송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국내 최초 소송이라는 사실 등 객관적으로 들어난 사실들만을 갖고 천성산과 지을 스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미 투쟁이 천성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난도질당하는 산하... 70년대 개발독재 지금껏 이어져

70년 이후 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곳곳은 난도질당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는 90년대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어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토목공사들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새만금 간척사업 등 굵직굵직한 토목공사는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거대 토목공사라는 점이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 또한 이 국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건설초기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건설기간 내내 부실공사, 정치자금 뇌물수수로 얼룩진 고속철도였지만, 국가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 토목공사였기에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공사중단 추측보도가 나올 때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을 운운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신문 등을 볼 때면, 이미 이 문제가 산과 자연을 보존하는 문제를 벗어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단지 건설업자가 무지하거나 환경 마인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구조가 그동안 생명을 죽이는 개발과 파괴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천성산 문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생명사랑, 평화운동과 맞닿아

또한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생명사랑 운동이자, 평화운동이다. '천성산과 도롱뇽을 살리자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간하게 알리는 생명사랑운동이다. 이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도롱뇽의 친구들이 "초록의 공명"이라 부르는 생명사랑 전과활동은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게시판 글 퍼다 나르기나 거리 서명작업 등을 통해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사랑의 근원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음은 물론이다. 생태주의와 평화주의는 맞붙어 있다는 거창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거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그동안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해온 이들은 모두 천성산과 자연의 평화를 기원해 왔다. 다른 이들의 것들을 빼앗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와 삶의 소중함을 조용히 전파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되는 평화의 메시지는 생태계와 인간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는 혹은 화합해 나가야 한다는 소중한 울림이다. 도롱뇽이 살 수 없는 산에서 결국은 인간도 살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단지 천성산이라는 하나의 산만을 살리는 운동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도롱뇽이라는 한가지 자연물만을 살리는 운동도 아니다. 천성산과 도롱뇽을 위해 25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도롱뇽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후 이들은 산과 들에 있는 많은 자연물을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법적 권리 담론 확산되길

고속철도 천성산 판통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스님의 단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천성산 살리기 운동으로 이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울 스님은 묵언과 단식으로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단식을 통해 이 사회의 온갖 문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말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강한 비판. 이것은 건설공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이를 묵인해온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정부를 향한 비판이다. 또한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비판이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제 시작한 고속철도 천성산 판통 문제는 이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함께 생각하고 싸워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현석(청년환경센터 대표)]

** 천성산 살리기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을 <http://cheonsung.com> 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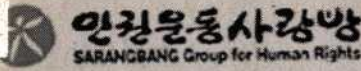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법 폐지에 합의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를 초월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가 일시적 주장이나 소수 정파의 힘없는 외침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보법 폐지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 당 또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폐지 이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폐지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7월 22일 서울을 출발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순례단'은 30일동안 850여킬로미터를 걸으며 20일 경북 경산에 도착했다. 도보순례 중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은 “4년 전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 '빨갱이 세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반공이태울로기가 많이 약화되고 인권의식이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국보법은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개정 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http://www.sarangbang.or.kr/haru/hrtoday_t.html?publishnum=2641)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24일 (화)
제 26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해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기소특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2.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3.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기소특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남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을 양지마을 사건과 병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양지마을 사건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이 씨가 고소한 자강원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되었다. 결국 남 아무개 검사의 불법행위로 이 씨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양지마을과 다를 바 없던 자강원 내 인권유린과 비리는 묻혀 버렸다. 이후 이 씨는 남 검사의 불법행위를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이 아무개 검사는 "심증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뒤에도 이 씨는 자강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진정을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출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자강원의 관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이 씨가 알코올 중독자로 신단된 역을 배회하다가 부랑인 단속에 걸려 시설에 인계된 것처럼 1998년 서류를 허위 조작했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강원과 천성원 재단 측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이 씨는 마지막수단으로 최근 사법개혁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3명의 수사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다. 이 씨는 "검찰, 법원, 시청 등을 돌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것은 검찰은 초록이 동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찰에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의 개혁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며 "기소특점주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소특점권의 폐해를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검사부터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실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것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해도 검찰이 자기 식구인 검사를 기소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특점권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출입국관리소의 폭력단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폭력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단속반원들은 실적 올리기식으로 공장이나 주택, 고시원 등에 무단으로 침입 해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연행해 가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7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명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방글라데시인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인권하루소식 8월 21일자 참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친구 차미경 대표는 "(A씨가)합법체류자임을 증명했음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불법 노동자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고문과도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친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범인은닉죄'로 강제출국 시킨 사례, 길에서 동남아시아인과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을 연행해 가고 주거침입과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목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폭행한 사건 등 출입국관리소의 야만적인 단속이 고발되었다.

하지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간 대표단의 "야간단속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천출입국관리소 송효근 조사과장은 "있지만 평소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다"며 폭력 단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발뺌했다. 이어 단속반원들에게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느냐고 묻자 "단속을 나가기 전에 매일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표단이 교육지침서를 볼 수 있느냐고 하자 "그냥 말로 한다"며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19일 단속을 나온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관계자도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쓴 적이 없다"며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폭력적인 단속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가 폭력단속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있어 맞는 사람이 있지만 때린 사람은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 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이 언론에 노출된 후 제안단체의 홈페이지가 흥분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그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별 걸 다 트집잡는다"라고 말한다. 이해할 수는 있다.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일상이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위험하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를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보와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데 모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자신의 정보가 발가벗겨질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또한 "성별구분을 안 하면 어찌자는 것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성별구분을 왜 해야 하는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뭘 때,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왜 성별구분을 해야 하는가?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을 때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시다. 게다가 생물학적 성정을 기준으로 한 구분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성적 정체성의 노출 자체가 폭력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관리하는지, 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부터 묻수하는지, 그리고 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적 정체성을 주민등록번호에 표기해야 하는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들은 "1번과 2번이 그렇게 큰 차별인가? 상관없으니 1번 가져라"라고 말한다. 제안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사실에 그들이 ऐसे 눈감은 점은 그냥 넘어가자. 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어찌되던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유지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에 분노하고 왜 흥분한 것일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소수일지라도 그에 따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의 문제제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권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산과 번거로움을 얘기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한 전력이 있다. NEIS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딪혀 수 십억의 예산을 아무 소득 없이 날려버렸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교통체계 개편에 향후 몇 년간 수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 예산은 본래 인권을 보장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지음 남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1.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별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구(8.16)/ 329개 인권사회단체,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 반대"하며 "진상규명 위해 국회 밖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통합적 기구 설립" 주장(8.2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 합의(8.23)

2. '인간사냥' 중단하라

법무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급증...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등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단속 추방 중단·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주장(8.17)/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들, 폭력단속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방문(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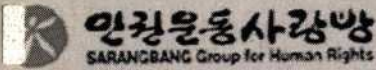
3. 주목할 만한 판결

대법원, "성매매여성 선불금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확정 판결(8.18)/ 서울중앙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며 강제 성추행한 남편에게 유죄 선고/ 검찰, 피의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영장 기각한 사실 밝혀(8.20)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25일 (수)
제 26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2. > 즐거운 물구나무 < 커피자판기 '미스 리'를 고발한다
3.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4.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기에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임시로 제정'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연이은 개정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 인권적인 법"이라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괴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권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단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시대적 당위를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 후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3조에서 13조까지의 처벌 규정은 대부분 형법이나 다른 법률의 처벌 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라며 "형법의 적용·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해 처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가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제 17대 국회가 답할 때"라며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도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진적으로 동의한다"며 "냉전시대에 한시적인 법률로 탄생하여 56년간이나 우리 사회와 국가를 눌러왔던 국가보안법을 이번 국회에서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는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법규정의 애매함이나 역사적으로 적용과정을 볼 때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암세포 같은 존재"라며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암세포를 우리 몸 속에 남겨두자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의 형법 흡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커피자판기 '미스 리'를 고발한다

웬만한 대중음식점이면 무료 자동 커피자판기를 비치해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즐겁게 담소를 나눌 때 혹은 식사 후엔 언제나 가벼운 후식거리를 원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커피자판기는 너무나 반가운 존재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너무나 당혹스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파하고 나오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짜커피를 뽑아 마시려고 손을 내밀려던 차였다. 자판기의 생김새나 모양, 커피의 종류 등 모든 것이 여느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자판기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글씨로 새겨 넣어진 상표명 'Miss Lee(미스 리)'라는 문구였다.

'미스 리', 자판기 이름으로 친근한 명칭을 사용하면 좋지 뭐 어떠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뭐 그리 호들갑을 떠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음식점 커피자판기 이름과 관련해 벌어진 헤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집단을 일반적으로 규정해버리고 대상화하는 폭력은 우리 일상에 숨어 꿈틀거리고 있다. "여자는 사무실의 꽃이야", "여자는 남자보다 일을 못해", "여자가 결혼했는데 무슨 일?" 등 여성을 가두는 무수한 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나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무의식중에 작동하여 많은 경우 '사적'이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 혹은 아예 문제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을 '쌈뎠' 취급하고 '예민하다'는 평을 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얘기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제 우리 안에 무의식처럼 존재하고 있는 성 차별적 인식과 일상의 폭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폭넓게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 성차별적 기제가 더욱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할 일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중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사업은 삼성그룹 산하 통신보안 서비스 업체인 에스원, 키오넷 인터내셔널, 농협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부안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씨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은 김중규 군수가 공약 시 내걸었던 노인건강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정보를 군내 병원과 약국 등에서 공유하여 환자의 치료를 원활히 하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 16일부터 독거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카드를 발급한 상태이고, 1000여 명의 부안군민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안휴먼카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의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 국가가 근거 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 병원·약국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했을 경우, 신체에 관한 고유한 정보가 유출되어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의료정보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부안휴먼카드 사업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민간업체의 전액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안군은 부안휴먼카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이후에 효용성이 검증되면 부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업의 진정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드를 현금카드, 교통카드와 겸용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부안군이 밝힌 대로 노인의 건강관리라는 애초 정보 수집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났고 있다. 부안휴먼카드를 취재하고 있는 부안독립신문 이영주 기자는 "발급 신청서에 정보 기입의 동의여부를 묻는 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입해야 할 항목은 25여 가지가 넘는 데에 반하여 동의를 받는 란은 하나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 중 하나인 키오넷 관계자에게 부안휴먼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묻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시행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의도로 16개의 지자체에서 키오넷 측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킹 지음 활동가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안군민 전반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영향 평가제 등 이후 제정될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안휴먼카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약한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현주소와 맞물려 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부안 휴먼카드 사업이 또다시 부안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인권 4대 사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국회기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들의 시위는 시작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직원들에게 저지되었고, 10여 분만에 30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방배, 강서 등 6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해 시위참가 사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수사 종료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밤 11시 경 풀려났다. 이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등 8명은 불구속 처리되었고, 이들 중 6명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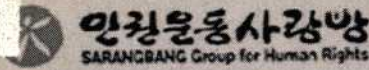
비록 국회 안이지만,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을 물린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벌금 선고를 받은 6명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26일 (목)

제 26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2.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3.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4. <알림> '국가보안법폐지 하루도보순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CCTV 관제 센터'는 이를 24시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감시카메라 100대를 인근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남구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7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강남구에서 시범운영중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시카메라가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버시운동 단체 및 학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이를테면, 통계 수치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범죄율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 홈오피스(Home Office)가 2002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카메라의 효과는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감시카메라의 범죄 예방 효과는 전혀 검증된 바 없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일 수 없다"며 "범죄자들이 감시카메라의 소재를 파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지능화만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범죄를 예방하려면 정복을 입은 경찰이 동네를 순회하며 지역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감시를 통해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법률상 감시카메라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우려를 잠재울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감시카메라가 지금처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시카메라가 설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반전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다. 국내에서 기획중인 민중재판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 정부의 과병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임을 확증하고 이에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심판 받지 않는 정부와 국가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는 민중에게 있으며, 민중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한 민중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민중재판운동은 '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데에도 비중을 둔다. 손 활동가는 "민중재판을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9월 중순까지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을 통해 발기인 총회를 열 계획이다. 민중재판소가 설립되면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고 민중재판소에 출두를 요구해 12월 전범 민중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전범 민중재판 운동은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제안돼 그해 5월 '자카르타 평화선언'을 통해 결의·선포됐다. 그 후 벨기에,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이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이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진행된 민중재판운동의 성과를 모아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국제전범 민중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28일에는 자이툰부대의 본격적인 이라크 파병이 예고되고 있다.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강행된 1차 파병에 이어 정부는 또다시 본격적인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남공향 앞 기자회견과 종묘에서의 집회를 통해 자이툰부대 파병과 노무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얼마 전 성 산업의 쇠사슬에서 착취당하던 여성들이 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 하나둘씩 죽어갔음이 밝혀졌다. 최대의 살인마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야단법석이지만, 고통의 숨소리를 내쉬며 사라져 갔을 피해 여성들은 놀라우리만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죽어서도 방치된 사라진 여성들의 비통한 상황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한 이 연쇄 살인의 공모자가 과연 누구일까 자문하게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추양되는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는 시공간을 불문하고 외모·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스펙트럼 내에 자리한다. 8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여성들이 시시각각 느끼는 범죄의 공포를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아울러 '피해자 유발론'을 들먹이며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8월 반딧불의 상영작 <사라진 여성들>은 다국적 기업, 멕시코 정부와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의 묵인·승인 아래, 1993년 이래로 250여 명의 여성들이 실종·살해된 멕시코 마킬라도라 지역을 조명한다. 미국과의 접경지이기도 한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차례로 사라지고, 유기된 시체만이 황폐한 흙먼지에 덮인 채 돌아온다. 사회적으로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 '알아서 몸조심을 해야 할 여자'에 불과한 이들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슬한 의문들만을 남긴 채,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감독은 다국적 기업의 탐욕, '가치 없는 죽음'에 수습방관하는 멕시코 정부, 빈번한 마약 거래가 발하는 은밀한 공기가 어우러진 이 음울한 공간을 영상화하며,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의 고통을 전이시키고 악몽과 같은 현실을 고발한다.

영화의 상영이 끝난 후에는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여성들이 느끼게 되는 분노와 공포의 심정을 중이를 통해 표현하면서 소박하나마 치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씨를 초대하여,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매 : 8월 28일(토) 오후 3시

△곳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대강의실
△문의 :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알림> "국가보안법폐지 하루도보순례"에 당신 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2004년 8월 28일 오후 2시~7시
- ▷ 구간 : 충주 ~ 원주
- ▷ 출발 : 충주 시외버스터미널 2시 집결
(서울 동서울터미널 충주 송강장 입구 11시)
-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016-729-536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31일 (화)

제 26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2. 현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3.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4.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중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인권위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부모, 대광고 교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승택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강의석 학생을 재입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아쉽다"며 "학교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도 30일 성명을 통해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이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의석 학생의 복학 조치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한 명확한 약속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연대회의는 "합의서에는 강의석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한 제적 조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학교측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교육권까지 박탈한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 조치에 대해 합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대광고측이 강의석 학생에 대한 복학 조치를 취할 것 △개별 진정 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현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

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 현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현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현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김정일, 전효숙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비폭력, 불살생 등으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대법원과 현재가 대체복무제에 대해 입법부도 공을 넘기면서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할 강력한 사회적 동기가 마련됐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결정 이후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에서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사 처음으로>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나,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울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기 의원은 17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주었던 과오를 극복하고... 제2의 제헌국회의원이라는 각오로 17대 국회를 성공시킬 역사적 소명이 있음"을 호소했다.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자를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 데서 자신의 좌표를 명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징할 수 있는 최우선 개혁입법과제는 무엇일까.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거둬드는 민중의 저항을 누르고자 졸속으로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기본법인 형법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 제정된 국가보안법, 그것은 제헌국회의 역사적 오점이었다.

정권수호를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오용과 남용의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었으나 속담에 고양이 쥐를 못 잡고 씨암탉만 잡는다는 격으로 정작 3천만 민중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 자손만대에 죄를 짓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빨갱이 마녀사냥'의 절대적 도구였다. 제정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소위 '국회프락치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희생되었다.

국회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3년 전시체제하에서 형법을 제정할 당시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형법 조문 안으로 흡수되었고 '부칙'에는 폐지대상 법령으로 국가보안법이 명기되어 있었다. 국회가 거수포결을 했으나, 전란의 와중에서 다수가 의사표시를 꺼리면서 2차례 미결되고 국가보안법은 자동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의 어두운 역사가 국가보안법과 운명을 같이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어갔다. 또한, 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국가안보위기로 호도하며 국가보안법의 개악을 시도할 때마다 국회는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결국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개정과 폐지의 호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만 실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제2의 제헌국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반민족·반민주·반민중적인 3반(反)의 '원죄'를 참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인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저는 버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프윈 씨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버마 민주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고, 버마 민주회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임종인 등 40명이 함께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은 "작년 5월 30일 테파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지 씨와 지지자들은 피습을 받고 250여명이 사상을 입는가 하면 그 이후 아웅산 수지 씨는 지금도 가택 연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버마에서는 1990년 5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교수, 기자 등 지식인 2백 여명을 포함하여 1,4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살해, 강간, 재판 없는 구금,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난민,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버마군은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 구타, 강간 등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박 부소장은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외교의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가 아웅산 수지 석방 및 버마 민주화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외교적 제재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대 한국정부가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없었거나,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적 관점보다 경제적 국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아세안'이나 '아셈' 등 아시아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버마 군사정부를 국제기구에서 제명시키거나, 경제제재 및 개발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장상미 활동가는 "버마 군사정부를 향해 외교·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선 이러한 조치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압력은 버마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이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조샤린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정부가 군부독재정권이 아니라 버마 민주화 운동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